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현 인 택*

— 목 차 —

- I. 새로운 국제질서의 신화와 진실
- II. 탈냉전의 평화
- III. 탈냉전의 국제구조
- IV. 동북아시아 변화의 역동성
- V. 갈등하는 한반도
- VI. 결 론

I. 새로운 국제질서의 신화와 진실

우리는 지금 거의 반세기만에 일어난 국제정치의 대변혁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한 대지각 변동은 분명히 1985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우리에게는 이름마저 생소했던, 그러나 이제는 그 어느 단어보다도 귀에 익은, 그러나 어쩌면 금세 낡은 사건의 한 모퉁이에 나 남아있게 될 지도 모를 운명에 놓인, 신사고(新思考)를 추진했을 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붉은제국」이었던 소련의 심장부에서 그야말로 이러한 신사고를 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소련의 개혁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세계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는 동인(source)이 되었다. 그후 동구유럽국가들의 체제개혁과, 독일의 통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등으로 유럽의 지도는 새로운 색깔로 칠해졌으며 이제 유럽은 새로운 통합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놀랄만한 변혁은 신사고의 주역인 소련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산(死産)된 3일의 쿠데타에서 우리가 목도했던 소

* 政博·사회과학원 연구위원

런 국민들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그 열정과 바램, 그리고 각공화국들의 자주권 확립과 이러한 결과로서 나타나게될 느슨한 형태의 연방은 러시아혁명 이후 70여년을 지탱해 왔던 사회주의체제의 소련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와 대변혁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국제질서에 대한 기본적 가정, 고정관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 우리가 갖는 신화(myth)와 진실(reality)은 무엇인가? 과연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는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 우리가 지금 던지는 다음의 몇가지 질문들을 살펴봄으로써 단편적이거나 얻어질 수 있는 것 같다.

- ▲ 탈냉전은 과연 평화를 의미하는가?
- ▲ 어떠한 국제구조가 안정적(stable)인가?
- ▲ 미국 및 유럽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선택방안은 무엇인가?
- ▲ 소련의 변화가 국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소련은 향후 어떠한 국제적 역할을 자임할 것인가?
- ▲ 이러한 국제구조의 변화가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 ▲ 최근의 국제질서의 변화는 일본을 군사대국화로 몰아 갈 것인가?
- ▲ 중국은 이데올로기의 고도로 남을 것인가?
- ▲ 최근의 변화는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새로운 국제질서구조의 시대에 어떻게 보장되어 질 것인가?

II. 탈냉전의 평화

탈냉전은 그자체로 평화를 의미하는가? 그 해답은 간단히 "아니다"이다. 냉전체제란 무엇인가? 냉전체제는 한마디로 미·소의 초강대국의 대립과 대결에 의해 국제질서가 유지되어왔던 체제이다. 따라서 양극체제(bipolarity)이며 양국이 가진 엄청난 핵능력에 의해 갈등속의 평화가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체제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대별되어지는 이데올로기의 투쟁의 체제이다. 이 체제는 그야말로 현실주의자들(Realists)의 세계에 대한 가정(assumption)과 그들의 분석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던 세계였다. 즉 그들에 의하면 세계는 흡스적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허들리 불」의 얘기하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하는 무정부적 세계(anarchical society)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국가의 주요 관심사이며 이것이 보장되기 위해서 동맹(

alliance)이 강조되는 그런 세계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국동맹(bilateral alliance-즉 한미동맹)이나 타자간 동맹(예로(NATO)이 다 이러한 논리적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냉전체제가 팽팽한 긴장과 대결의 체제이긴 하나 적어도 제1차, 2차세계대전과 같은 강대국 끼리의 전쟁은 없었던, 그런 의미에서 평화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냉전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새로운 체제로의 이양은 그간에 유지되어 왔던 평형(equilibrium)이 깨어지고 새로운 평형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과도기적 시기를 의미한다. 그것은 어떠한 체제든 일단 평형이 깨어진 상태는 불안정하고 새로운 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불확실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는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잘해야 「불안한 평화상태」(전쟁의 부재 상태)이므로 올바른 의미의 안정된 평화라고 볼 수가 없다. 지금이 이러한 새로운 평형의 모색기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평형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의 여부는 결정되리라 다짐한다.

Ⅲ. 탈냉전의 국제구조

향후의 국제정치의 모델로서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가 1개국 지배체제인 헤게모니체제, 둘째가 냉전체제의 유형인 양극체제(bipolarity), 셋째가 다극체제(multipolarity)이다. 헤게모니체제는 그야말로 가장 안정된 유형의 체제이며 과거 대영제국이 지배하던 그런 체제였다. 현실주의자들이 갖는 생각은 적어도 헤게모니체제나 양극체제가 국제질서에 안정적인 체제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학자들은 다극체제가 양극체제보다 더욱 체제안정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다극체제의 모델로 19C의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변화는 일부 낙관주의자들에 의하면 오히려 냉전의 종식으로 전쟁가능성이 줄어들었음으로 국제체제는 보다 안전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탈냉전의 국제구조 및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구조들이 이루는 중요인자-즉 주요강대국들-에 달려있다고 보아진다. 즉 미·소 및 유럽등의 국가들의 선택과 역할에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있어서 적어도 당분간 정치적·군사적 헤게모니국가(hegemon)로 남을 것이다. 80년대에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세계초강대국으로서의 퇴조를 얘기하고 예견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90년대에 와서 미국은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 누려왔던 세계적 지위 이상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조셉·나이」

같은 학자가 바로 이러한 주장의 주요 지지자이다. 물론 단순히 소련의 쇠퇴와 몰락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제로·섬」(Zero-sum)적 사고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국가로서의 우의를 논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국제질서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즉 향후 미국이 소련을 어떻게 국제구조속에 위치시킬 것이냐하는 문제인데 과거의 냉전적 사고는 앞서의 「제로·섬」 등식을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소련의 완전한 몰락과 쇠퇴 및 장기적인 내적 불안정은 오히려 지금까지 국제구조를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던 축 중의 하나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구조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과연 이러한 상태를 바라느냐 하는 데는 회의적이다.

소련에서의 3일의 쿠데타의 실패가 의미하는 것은 소련체제 개혁의 내용과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의 소련의 상황은 쿠데타 이전에 예상했던 고르바초프가 이끄는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 색깔을 가미한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완전한 혁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 태어날 소련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치·경제체제, 적어도 형태에 있어서는 민주정책 및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로 보아야 한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도로 팽창되었던 소련세력을 저지시키고자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부르짖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유럽을 재건, 부흥시키는 일이었다. 마샬플랜을 통해서 엄청난 원조를 하였다. 그 기본적인 생각은 국제구조의 세력균형(alance of power)이었다. 즉 과거에 강대했던, 그러나 2차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유럽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새로 형성될 국제구조의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소련에게는 어떠한가? 미국이 과연 전후 유럽에 했던 마샬플랜과 같이 대규모의 원조를 소련에게 할런지는 아직까지 합의가 없으나 적어도 소련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그의 재건을 도울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하나는 소련이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에 도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분간 현실적으로 소련이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처럼 미국에 필적하는 세력으로 재등장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미국은 소련의 그러한 기도를, 만약 있다면, 단호히 배격하려 할 것이다. 둘째는 소련이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충실한 지지자(support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미국이 소련에게 요구했던 5개항의 전제조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소련은 민주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로서 국제적 안정과 평화에 일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의 국제구조의 모습은 적어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이라는 1개의 헤게모니국가(hegemon)와 소련 및 유럽이라는 지지자(supporter)로서 이루어지는 안정적

체제,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과 일본이 공동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집단지도 체제 같은 유형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아진다. 따라서 국제체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더 다이나믹한 그리고 변형된 형태의 헤게모니체제라고 할 수 있다. 소련으로서는 지금 당장으로는 어떠한 다른 선택방안이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빵의 문제의 해결 및 국내정치개혁에 몰두해야만 하는 입장이며 이것을 위해서 서방세계의 긴급수혈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국내개혁의 실패는 소련을 미국이 주도하는 안정적 국제체제의 훼방꾼(spoiler)으로 만들지 모른다.

유럽은 정치·경제체제 면에서 공히 미국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향후 유럽의 과제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이미 예정된 EC통합을 어떻게 순조로히 해나가느냐 하는 것과 둘째는 향후 유럽의 안보를 어떠한 형태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두번째 문제는 유럽이 이미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통해서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유럽을 하나로 하는 집단안보체제(collective security)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만약 유럽이 경제적으로 통합이되고 군사적으로 집단안보체제를 이루면서 소위 「새로운 유럽협조체제」(New Concert of Europe)을 이뤄냈을 경우 이처럼 강대해진 유럽은 세계정치무대에서 우리가 과거 40여년을 보아오던 유럽이 아닌 새로운 유럽을 의미하며 이 경우 유럽의 운신의 향방은 국제구조의 안정성에 핵심문제가 될 것이다.

IV. 동북아시아 변화의 역동성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의 동북아시아는 그야말로 이러한 변화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러한 변화 자체에 거꾸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의 지역이 변화에 독립변수로 작용하기 보다는 부수적 요인으로 남을 전망이 큰 것과는 달리 동북아시아는 이미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서 그 운동성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운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국제적 세력으로서의 일본이요, 다른 하나는 동북아세력으로서의 일본이다. 일본은 이미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미국 및 유럽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국제적 세력으로서의 일본의 지위와 계속적 성장은 일본이 향후 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

경제질서를 이끄는 주도적 국가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치·군사적으로까지 역할확대를 꾀한다면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세계 정치·군사세력으로서의 운신에 기본적으로 회의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동북아세력으로서이다. 동북아세력으로서의 일본은 정치·경제·군사 면에서도 명실공히 강대국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제정치의 향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듯 하다. 즉 이 지역에서의 소련의 퇴조와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 부담 요구 등으로 일본의 운신의 폭은 넓어지고 이러한 기회를 일본은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슬며시 군사화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과연 군사대국화로 갈것이나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한가지는 문화적,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즉 일본은 역사적으로 해양세력으로서 인근 주변국가들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으므로 군사대국화는 필연이며 지금도 상당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의 해외파병도 다 군사대국화의 기도라는 시각이다. 또 하나는 실증적, 구조적 접근방법인데 이는 현재의 일본의 군사력의 실상,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는 일본의 군사구조의 내용 및 역사성을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이다. 즉 일본이 미·일동맹의 「주니어·파트너」(junior partner)로서 참여하는 한 동북아의 세력을 넘어서는 군사대국화는 당장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필자의 생각은 이 두번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두번째 시각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의 「일본경제론」에는 첫번째 시각과 견해를 같이한다.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세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이며 나머지는 중국과 한국이다. 미국은 이미 군사적으로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미국의 의도와 행동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성패와 직결한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과거 40여년을 유지시켜왔던 미일동맹구조를 변화시키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소련이 쇠퇴하는 지금 이 지역에서 소련이 재래식무기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며 군사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과거 10여년 동안 태평양함대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군사력을 이미 키운 미국이 일본에게 어떠한 중요한 군사적 임무를 맡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진다.

다만 중국의 변수가 문제가 된다. 중국은 지금 북한, 쿠바와 함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고도로 남아있다. 중국의 향방은 향후 국내정치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와 관계가 있고 그 중에서도 동소평의 사후(死後) 또는 실권(失權) 이후 중국의 지도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와 그를 둘러싼 국민들의 민주화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 것이냐에 달려있다. 이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보수파가 완전히 권부를 장악하고 국민의 민주화 움직임을

혹독하게 탄압하면서 지금의 어느 정도의 개방된 경제체제에서 완전히 폐쇄된 국가경제체제로 돌아가면서 소위 이데올로기를 같이하는 북한, 쿠바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국제 정치의 완전한 분재아로 등장할 경우이다. 국제안정의 훼방꾼(spoiler)으로서 중국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미국의 허락 하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증대될 지도 모른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제어축 중의 하나는 또한 한국이다. 한국이 일본을 군사·안보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수단은 한미동맹이다. 즉 미일동맹과 더불어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안보의 핵심틀인데 이들은 일본과 한국이 안보적으로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것이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일본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없다면 한국은 일본의 「안보적 위협」에 대해 보다 심각한 우려를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은 「양날의 칼」과 같은 이중적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런 면에서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 최근에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의 목소리도 있는 듯 하나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당분간 한일의 안보적 협력은 있더라도 군사 정보교환과 상호훈련참관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겠지만(이러한 수준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논란이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한일의 안보적 관계는 미국을 중재자로 하는 한·미·일의 삼각관계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하겠다.

V. 갈등하는 한반도

한국으로서 보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것이 최근의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국제정치상황은 한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어간다는 사실이다. 한미관계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지속되고 있고 한소관계는 최근의 소련사태와 더불어 더욱 빠른 속도로 증진될 전망이고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한중관계가 정식 외교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러한 변화들이 한반도에 과거보다 더욱 안전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지표들이 반대로 북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지표로 나타남으로써 북한의 위기 의식을 자극시켜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정을 전보다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결국 주변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갈등관계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은 이를 중화시키는 적절한 보장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현안문제들로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의 군사력 문제이다. 북한은 속전속결에 의한 기습공격을 주전

략으로 그의 전력의 60%이상을 휴전선 근처에 전진배치시켜 놓고 있다. 최근 몇년의 경제침체는 북한의 군사비지출의 상승폭선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기습전의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기습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의 억지력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들이 적어도 향후 5년을 주둔할 것으로 보면 주한미군의 우수한 정보체제와 공군력을 감안할 때 한국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결국 「재래식무기에 대한 공포의 균형상태」가 지금의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방향 밖에 없다. 하나는 계속해서 남북한간에 「죄수들의 딜렘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상호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란 긴장의 연속이 된다. 다른 방향은 군축및 정치적 해결이다. 이는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defacto peace)를 보장해 주는 길이 된다. 이것이 두번째 현안문제이다. 군축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남북한 양측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군축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전혀 다르다. 한국은 소위 기능적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즉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우선시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축소에 나서자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 군사정보의 교환(훈련참관, 군대이동을 미리 알려주는 등)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관계를 쌓고 다음으로 군사력 감축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 군축협상의 실례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북한은 소위 리버럴(liberal)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군축협상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이는 군사력 감축만이 rnd으로 전쟁억제를 할 수 있음으로 이를 먼저 실현시키자는 것인데 신뢰구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한 이러한 어프로치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세계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이다. 최근 북한은 영변지역에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IAEA의 협정에 서명하고 현장검증(on-site inspection)을 허락할런지는 아직 두고 보아야 하나 북한이 핵개발을 허용할 경우 이는 단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가 된다. 이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미소의 핵전쟁의 가능성이 없어진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삼세계에 의한 핵도발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다른 제삼세계들로의 핵확산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여부가 지금 「테스팅 케이스」(testing case)가 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의 안보를 자극하여 한반도에서 핵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일본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핵확산이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할 수 있다.

네째는 주한미군철수 문제이다. 이는 이미 한미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로

다만 언제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그러나 철수하더라도 당분간 완전한 철수는 하지 않으리라 보인다. 보다 주요한 현안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것으로 보도되는 전술핵의 문제인데 지금의 변화된 상황에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안보를 증진시키는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협상에서 이를 협상수단(bargaining chip)으로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동북아집단안전보장의 구상인데 이는 소련이 제시한 것으로 소련의 상황이 변하고 따라서 동북아의 안보적 상황이 변해버린 지금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남북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가장 흔하게 거론되어 오던 것이 주변4강에 의한, 이들의 어떤 합의(교차승인이든 다른 방식이든)에 의한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식인데 이러한 발상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주변강대국에 맡기는 것으로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한반도의 평화의 신화와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할 신화는 새로운 구조 속의 낡은 의식이며 우리가 똑바로 보아야 할 진실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과거 수십 년의 세월동안 가졌던 세계에 대한 고정관념, 기본적 가정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세계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과거의 낡은 의식, 신화를 버리고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할 때 얻어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인식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해야 할 기본적 과제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원칙과 실력이 겸비된 자주적 외교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화의 가속화 및 경제발전을 통한 훌륭한 시민사회의 건설이다. 발상의 전환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능력이 있으며 국제적 환경이 허락한다면 이것은 이미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인 정신적 통일을 성취할 것이다.